

“광주 시민사회, 위기에서 빛났다…시민행복 실천”

광주시·시민단체 제5차 토론회

탄핵정국·여객기 참사 등 협력 대응
민관 협력·배려 행정 등 강화 다짐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 모색

“비상계엄·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위기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은 빛을 발휘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실천을 위해 동행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1층 스튜디오에서 ‘제5차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3년 1월 첫 토론회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토론회 개최를 정례화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해진 주제없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특히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의 목표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의 ‘광주의 도전과 변화 그리고 광주의 내일’이라는 주제발제와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12·3 내란 종식과 민주회복을 위한 광주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발제로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 △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제5차 시-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에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방분권과 마을자치 강화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대자보 도시를 위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한 광주시 실행방안 등을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시민사회 동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등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며, 탄핵정국 등 위기에서 빛난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 시대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자성과 함께 행정에서의 공간·인력·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했던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등 상주 역할로

참사의 아픔을 꺼안은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사례에서 행정과 시민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은 확인됐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표는 “시민사회 활동이나 행정은 시민 삶의 안전 유지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 지하철2호선, 군공항 문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려는 추진력과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놓치지 않고 긴장감과 집중

력 발휘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뜻한 배려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과 시민사회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잘 실천하기 위해 행정은 시민사회로, 시민사회는 행정의 방향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한발짝 두발짝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시민사회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지원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까지 민선 8기 들어 총 다섯차례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2023년 1월30일 첫 번째 소통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12일 복합쇼핑몰·풍암호수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2차토론회를 진행했다. 2024년 3월26일에는 중앙공원1지구 관련 3차 토론회를, 같은해 7월11일에는 민선 8기 2년 성과를 돌아보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4차 토론회를 이어갔다.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 도입

3647곳 실적·행정처분이력 심사 거쳐 30곳 지정…현판 제공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 30곳을 지정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개소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정에 앞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협력해 신청자격, 중개실무, 거래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주민 소득증대 지원

곡성 죽산마을·장흥 지북마을 마을당 5억…특색사업 발굴 앞장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추진과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에 곡성군과 장흥군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곡성 석곡면 죽산마을(대표 최귀화)과 장흥 관산읍 지북마을(대표 이용재)에는 마을당 5억 원씩 총 사업비 10억 원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생산·가공·체험 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지원마을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곡성 죽산마을을 주요 특산물인 ‘백세미’ 쌀로 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참여해 2016년부터 전통 조청과 옛 제조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해 명절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죽산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HACCP 인증 등 보다 체계적인 전통식품(엿·조청) 생산·판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무형문화재 제140호 삼베짜기인 ‘돌실나이’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 마을 활력 증진도 도모할 계획이다.

2005년 전통 발효차 청태전 생태체험마을로 지정된 장흥 지북마을은 유기농 인증면적 53.3ha에서 벼, 차, 조, 찻잎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북마을은 유기농 차를 활용한 체험장 시설을 확보해 차 재배를 확대하고 친환경 브랜드를 구축, 마을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 도모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에 조성된 동백나무 길, 주변 자연경관(지정저수지·소산봉)과 연계한 체험 관광코스도 계획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전통산업을 연계·활성화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특색을 살린 친환경농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전남도는 지정 요건을 갖춘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은 현재 68개 마을이 지정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100개소를 지정·육성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농기계 방치 전수조사 실시

과태료부과·매각·폐기 조치

전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 및 폐기 등을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인한 농촌경관 저해와 및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수산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체계 구축 등 893억 투입

전남도는 올해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산식품산업 육성, 신 유통체계 구축, 천연염 산업 육성, 청년창업 지원 등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89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기업 가공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총사업비 1137억원) 내 국제마린길 거래소, 임대형 가공공장을 2026년 2월까지 준공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마린길 가공업

체 시설 개선 등 15개 사업에 539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최근 물김 생산량 확대에 맞춰 마린길 가공기업의 가공능력 향상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번 정부추경에 마린길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00억원 국비 편성과 ‘마린길 정부비축’ 사업비 600억원 지원도 건의 중이다.

또한 마린길의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마린길 물류단지(FDC·FPC) 건립,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건립 △수산물 유통

상자 보급지원 △수산물 시장 시설 개선 등 21개 사업에 226억원을 투입한다.

천일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채염기 등 자동화장비 보급 △염전 바닥재 개선 등 위생시설 지원 △소금박람회 등 브랜드가치 제고 등 14개 사업에 108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규·예비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을 통해 신규창업, 혁신제품 개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전문가 기술교육, 수출시장 개척 등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